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음 11월 13일) 제21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끊겼던 뱃길 다시 열린다

비안도·두리도 도선운항
여객선 중단된지 17년만
전북도-군산시 등 합심
민원해결 조정 합의 해결

전국 도서중 유일하게 여객선이 중단됐던 비안도·두리도 뱃길이 열리게 됐다.

전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 등이 모두 합심하여 수년간 40여 차례 회의와 민원조정 끝에 마침내 민원해결 조정서 합의로 도선운항 갈등이 해결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도선운항 뱃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1998년 12월 1호 방조제(대항리~가력도, 4.7km) 준공 이후, 대부분의 비안도·두리도 주민 등은 어선을 이용, 접근성이 좋은 가력선착장으로 육상 출·입항함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하여 2014년 12월 군산해양수산청에서 비안도 항로를 폐쇄하여 비안도(두리도) 뱃길이 완전히 끊기게 됐다.

이에, 비안도·두리도 주민 등은 자구책으로 2013년 8월 소형어선 20척(2톤~4톤, 편도 10만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특별검사를 받아 지역주민 및 도서 근무자(교사 등) 등을 수송하고 있어, 소형어선에 몸을 싣고 해상 위험에 노출된 생명을 건 육지 나들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동안 전북도는 비안도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2002년부터 비안도 도선운항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관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협업을 수행하여 왔고, 관계기관 회의와 주민 간담회를 40여 차례 실시할 정도로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경주한 끝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갈등은 2015년 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될 만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생존권적 문제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침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도선운항 민원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하루 속히 비안도·두리도 주민 등의 안전한 해상 교통편 제공을 위해 2018년 12월 도선 건조비 5억 중 도비 2억원 우선 지원하는 등 도선운항 예정인 2019년 8월 해상 교통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력선착장~비안도 도선 운항거리 4.5km(15분 소요)로 운항거리와 소요시간이 군산항~비안도 여객선 57km(소요시간 150분), 무너도~비안도 14km(40분 소요)와 비교해 보면 운항거리와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지게 되어 그만큼 이용 편의성이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다.

예부터 비안도(飛雁島)는 고군산군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멀리 떨어져서 보면 날아가는 기러기 모양과 같다고 해서 비안도라 불린다.

지금까지 도선이 없어 가깝지만 가기에는 매우 어렵고 먼 섬이었으나, 2019년 8월부터 도선운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누구나 쉬게 접근할 수 있는 섬으로 탈바꿈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모두의 도움과 이해로 17년만에 비안도 주민들의 해상 교통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비안도~가력선착장 도선운항 갈등이 조정되어 마무리되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반구심리(半九心裏)' 자세로 하루 속히 도선을 건조하고 운항을 시작하여 도서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선박사고와 위험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군산=김정훈 기자

매일 INDEX

- 2면 -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선정
- 4면 - 차선도색 부실공사 무더기 입건



희망의 종이비행기를 날려라... 새만금 잼버리 서포터즈 발대식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서포터즈 발대식이 18일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원, 정병익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수 새만금잼버리 범도민지원회 이사장,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및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희망 글귀를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며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주시, 내년도 청년지원사업 확대

지역주도형 일자리 등 취업, 작년보다 114명 늘어난 329명
청년취업 프로젝트, 올해보다 2배 증가한 200명으로 늘려

전주시가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취업지원 사업을 지난해 215명에서 114명이 늘어난 329명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들의 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돕는 청년취업 프로젝트도 올해 100명에서 2배 늘어난 200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현재 청년단체들이 주체가 돼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초기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우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 창업기반을 마련하는데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국비와 도비 26억8900만원 지원이 확정된 상태로 지역 청년 2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배치운영 △전주푸드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등 기존 5개 사업에 신규사업인 △바이전주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천만고루 가든시티 전주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역 ICT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청년창업공간 '홍부'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며, 기존사업으로는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배치운영 △전주푸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이 포함될 총 22개 사업이 추진돼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날 수 있게 됐다.

확정된 사업은 내년 1~2월 중 참여자 모집과 직무역량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청년취업2000사업'과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기업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기로 했다. 사업규모도 올해보다 15명 늘린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잇따른 구직실패로 지친 청년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원포 프로젝트'의 대상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참여 대상자 연령기준을 만 18~34세에서 만18~39세로, 소득기준도 기존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로 완화하는 등 더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상상놀이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공모전 참여 지원 △플리마켓을 통한 아이템 조사 기회 제공 등 초기 청년 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창업 인큐베이팅 체계를 구축,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창업지원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도, 2020년 예산 확보 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 최초로 연간 7조원대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가 2020년 예산 확보를 위한 조기 시동을 걸고 나섰다.

전북도는 2020년 정부예산 확보의 본격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군 국가예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부안 해나루 호텔에서 도·시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이달 8일 역대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정부예산 확보에 큰 의지를 다지는 의미를 담았다.

워크숍은 기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부예산관련 국장과 서기관을 초청해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의 부합성(국가적 필요성), 시기적 필요성 등 사업 타당성(필요성)의 논리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전략 컨설팅 특강이 마련됐다.

또 정부예산과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국회 보좌관을 초청, 평소 담당 공무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예산 소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